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1127
----------	------

제출일자 : 2015. 7.

제 출 자 : 달 성 군



1. 의결주문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 개선 과제」, 「중앙정부 발굴 4대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 통보」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하는 「전국규제지도」의 부진지표 개선을 위하여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정비하여 군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가족관계 등록 관련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동 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의 감축(안 제1조)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조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는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와 인명피해 보상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서는 그 지원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환경부 고시를 반영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강화(안 제5조)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해소(안 제7조)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1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제한,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 삭제
-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제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안 제8조)

바.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 위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07.8.3.)으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졌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위 조례를 폐지(안 제9조)

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반복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외형상 ‘무제한 반복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규제지도의 주요한 개선지표이므로 대구광역시의 가이드라

인에 따라 반복심의를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2조)

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금전납부 의무(가산금)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근거인 「소하천정비법」 제23조를 명시함(안 제13조)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시의 군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없으나 우리군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보다 더 강화된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군 조례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조례상의 기준을 사용(안 제15조)

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요건 통보받음에 따라 담배와 관련이 없어도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 치아홈메우기 및 광중합을 이용한 충치 치료의 경우 방문당 수가 기준으로 치과치료의 제한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한 번 방문으로 여러 치아를 예방치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방문당 수가 기준을 삭제하고, 치과 진료수가 기준【별표3】을 개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

-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항), 제1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는 각각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할 때 당연직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3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촉직 위원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황임.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유착관계 형성 및 부패의 소지로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00년으로 하되, 0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

(4) 규제심사 : 의견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6. 1. ~ 2015. 6.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제출 1건

- 의견제출자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제출내용 : 제16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개인” 으로 개정 의견
- (6)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 (7) 합의 : 종합민원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도시과, 안전방재과, 교통과, 경제과, 건강증진과, 농촌지도과 합의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및 폐지한다.

제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람”을 “사람,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를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제2호의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은 피해”를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3호의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입은 피해”를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하되, 그 위탁계약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6조제6호라목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의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안전처리는 안전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전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표 2]와 같다.”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하며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을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로 한다.

제1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규칙)”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제8조에 따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스케일링수가 및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 수가”를 “치아홈메우기(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수가, 불소도포 수가, 광중합을이용한충전치료 수가, 치면세마 수가”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치과진료수가기준

(단위 : 원)

종 목	진 료 내 용	수 가 결 정 액	
		기 준	수 가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	치면 열구전색	치아당	5,000
불소도포	불소도포	전악 1회	5,000
광중합을 이용한 충전치료	충치 치료	치아 당	10,000
치면세마	치면활택술	전악	1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제16조(위원회 구성)</p> <p>①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후단신설></p> <p>1.~ 2. (생략) <신설></p> <p>③ (생략)</p>		<p>제16조(위원회 구성)</p> <p>①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 -----,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2. (현행과 같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u>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5조(위원회설치 및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u>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5조(위원회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p>		

<p>③ (생 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후단신설></p>	<p>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사람,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중-----</p> <p>-----.</p> <p>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6조(위원회설치 및 구성)</p> <p>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p> <p>1~4. (생 략)</p> <p><신 설></p>	<p>제6조(위원회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p> <p>-----.</p> <p>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p>

⑤ (생략)	있는 사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제5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p> <p>2.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은 피해</p> <p>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입은 피해</p> <p>4.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p> <p>5. 의료기관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p> <p>6. 기타 보험금을 받는 경우</p>	<p>제5조(보상 제외) -----</p> <p>-----.</p> <p>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p> <p>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p> <p>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p> <p><삭제></p> <p><삭제></p> <p><삭제></p>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p>

<p>1.~ 4. (생략) <신설></p> <p>5. (생략) ⑤ (생략)</p>	<p>-----,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4. (현행과 같음) 4의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되, 그 위탁계약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p> <p>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p> <p>5. (생략)</p> <p>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p>	<p>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p> <p>1. ~ 2. (현행과 같음) 3. ----- ----- ----- -----한다.</p> <p>4. ----- ----- -----내용 -----.</p> <p>5. (현행과 같음) 6. ----- ----- ----- -----</p>

<p>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수탁업소(시설)나 위탁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p> <p>마. (생략)</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p> <p>-----</p> <p>-----</p> <p>-----</p> <p>-----</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p> <p>-----내용</p> <p>-----</p> <p>마.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고려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5조(위원회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5조(위원회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p>

1. ~ 5. (생략) ⑤ ~ ⑥ (생략)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 경우 위 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 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회의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제6조(회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안전처리는 안전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전을 포함

	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징수) ① (생략)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 정비법」 제23조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안전방재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후단신설> ④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제3조(주차요금) ① ~ ② (생략)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 3. (생략) ③ (생략)</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p>	<p>제3조(주차요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1. -----제2조제22호에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u>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제1조(목적) ----- -----제7조제4항-----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별표3】

치과진료 수가기준

(단위 : 원)

종 목	진료내용	수가결정액
스케일링	치석제거	20,000원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이용한 충전치료	충치치료	10,000원

【별표3】

치과진료 수가기준

(단위 : 원)

종 목	진료내용	수 가 결 정 액	
		기 준	수 가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	치면 열구전색	치아당	5,000
불소도포	불소도포	전악1회	5,000
광중합을 이용한 충전치료	충치 치료	치아당	10,000
치면세마	치면활택술	전악	10,000

상위 및 관계법령**안 제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⑤ 시·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⑥ 시·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2조 ~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5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 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안 제9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상위 및 관계법령**안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상위 및 관계법령**안 제13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15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

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 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

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1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등)

-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

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